



정책포커스

상생협력·갈등관리: 동향과 대안

Co-living/Conflict Mgmt.-Issues & Alternatives

권두언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본포럼 상임고문)

중앙정부 갈등관리기관 탐방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

기획특집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을 통한 전국 제1의 도 구현

전국광역자치단체 상생협력갈등관리 주요사업활동 소개

충청남도/대전광역시/경기도/강원도/경상남도

자치상생마당

이은태 충청남도의회의원(행정자치위원장)

강희복 아산시장도시계획공학박사)

전문가정책제언

최정진(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2008. 제 2 호

정

책

포

커

스

발행인 |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편집인 | 이주영(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상임공동대표)

발행일 | 2008년 11월 1일

편집위원장 |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편집위원 | 길병욱(충남대) 류상일(대불대) 박수경(충청뉴스)

오은순(공주대) 이영훈(한서대) 정봉희(충남발전연구원)

편집간사 | 이준건(충남발전연구원)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디자인·인쇄 | 중부인쇄기획 042)253-7537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TEL : 041)840-1132~3

FAX : 041)840-1129

<http://www.pcpt.or.kr>

〈상생협력·갈등관리: 동향과 대안 정책포커스〉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포럼에 있습니다.

정책포커스

상생협력·갈등관리: 동향과 대안
Co-living/Conflict Mgmt.-Issues & Alternatives

2008. 제 2 호

Contents



04 권두언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본 포럼 상임고문)

06 정책포커스 칼럼

· 지방정부, 갈등 피하고 협력 나서야/ 조성남 박사 (본 포럼 공동대표)

08 선진국 갈등 해법 소개

· 미국의 갈등관리 법·제도 현황/ 박홍엽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12 탐방/ 행정안전부갈등업무 소개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16 기획특집 : 전국광역시자치단체 상생협력갈등관리 주요사업활동 소개

- 충청남도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을 통한 전국 제1의 상생협력·갈등관리 도구현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을 넘어 이웃과 함께”
- 경기도/ 수도권 상생협력 모델,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시행
- 강원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의 배경과 향후과제
- 경상남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제2호 「정책포커스」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38 전문가정책제언

- 상생발전 성공요소와 전제조건
/ 최정진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42 충남북부권역 상생협력정책포럼의 운영사례

- / 최한규 박사 (포럼북부권포럼 운영위원장)

48 자차상생마당

- 「갈등」의 매듭을 푸는 「상생」의 결정을...
/ 이은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정자치위원장)
- 주민기피시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 강희복 아산시장 (도시계획공학박사)

54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한국NGO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56 상생협력·갈등관리 동향

- 충청지역 언론보도내용

66 상생갈등 관련 도서안내



김 용 응 | 충남발전연구원장 (본 포럼 상임고문)

본래 민주주의란 갈등과 협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가운데 참여주체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형성하는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혹자는 갈등과 분쟁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상정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다양한 주체들이 공존·경합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미 생명력을 잃은 죽은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어떻게 봉합하고 갈등을 원만히 조정, 해결하느냐가 선진국으로 가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뚜렷한 성과를 내기란 시기적으로 이른 감도 있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 상생협력의 문제를 끌어안고 조명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역간 협력사업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다 민간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포럼사업을 통해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학습과 실현가능한 대안마련을 위한 제도화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발전의 중요한 인프라이며, 이로써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상생·협력·신뢰와도 같은 귀중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포럼 활동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갈등의 예방적 효과와 함께 현장지향적 이해조정을 위한 각종



전문적 지원과 컨설팅·코칭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최근 충남도내 어느 지자체의 쓰레기처리장 후보지 선정문제를 비롯해 혐오 시설, 선호시설 입지문제 등으로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문제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에는 도로와 항만, 철도, 공중 편의시설 등 기간산업 시설을 얼마만큼 확충했느냐가 업무수행의 평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예방,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타협·조정하느냐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충남포럼은 국정관리 및 지역발전을 위해 당사자 간 이해를 슬기롭게 조정하고 상호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가치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체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 관, 산, 학, 연, 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통은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능률과 효과를 신장시키는 등 행정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체가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진입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여 상생과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미래 행정의 블루오션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포럼은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개선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건의를 하는 한편, 자치단체와 관련한 갈등의 문제를 실질적, 생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만들어 공공갈등의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8월 「정책포커스」 창간호에 이어 제2호 발간을 축하하면서 이러한 포럼공간이 다자간의 이해를 좁히고 지역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정부, 갈등 피하고 협력 나서야



조 성 남 | 본 포럼 공동대표·행정학박사

필자의 2005년도 박사학위논문은 지방정부의 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해 여기서 어떤 정책적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를 다룬 ‘지방정부의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였다.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가 지방정부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이라는 최근 부상되고 있는 이슈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30여년의 언론계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숭한 갈등사례를 보아왔으며 이러한 갈등사례가 불가피한 사회현상이기는 하나,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데서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물론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언제 어디서고 존재하며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사회에서 갈등을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현

상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의 종결이 사회적 자원, 즉 인간관계 또는 상호신뢰와 같은 사회 자원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필자가 학위논문에서 다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는 두 가지로 그 하나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충남도가 추진했던 ‘계룡산자연사박물관사례’였고 다른 하나는 2000년대 대전시가 유성구에 추진했던 ‘봉명지구위락시설허가를 둘러싼 갈등사례’였다. 우선 계룡산자연사박물관사례는 갈등의 전개과정으로 볼 때 전형적인 갈등의 「잠재기→표출기→확산기→조정기」를 거치면서

박물관건립이 추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갈등 사례는 그 본래 취지가 매우 바람직한 정책목표에 기반을 두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자연훼손이란 비난을 받았으며, 시민단체의 극심한 저항을 면치 못했다. 아울러 검찰수사 및 관련공무원의 뇌물수수사실이 드러나 건립이 중단됐다 다시 추진되는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 비록 자연사박물관 건립이란 정책목표는 달성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양상으로 지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책갈등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유성구봉명지구사례 역시 대전시가 유성지역을 특색 있는 관광위락지구로 만들겠다는 바람직한 정책목표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와 유성구, 유성구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무엇보다 유성구에 러브호텔이 난립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지역민·교수·학생이 참여한 갈등구조를 빚은 대표적 정책갈등사례였다.

이 갈등사례는 사태발생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봉명지구에 건축허가를 유보한 유성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법원이라는 제3자의 중재에 의

해 갈등이 해결되는 것으로 결말이 이어졌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에서처럼 정책갈등이 지역사회에 후유증을 남긴 것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정책갈등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노력여하에 따라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또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는 데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이른바 거버넌스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갈등과 반대개념이 협력인데 갈등이 당사자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 데 비해 협력은 정책관련기관및 주민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수도권규제를 풀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지방축이기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지방입장에서는 가능한 지방정부의 협력만이 지방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갈등관리 법·제도 현황



박 흥 업 박사 | 국회예산정책처 정책분석관

1. 미국의 갈등관리 관련 법률¹⁾

미국의 대표적인 갈등해결관련법은 1990년 제정되었고 1996년 다시 입법화된 행정분쟁해결법(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이다.

두 법 모두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행정분쟁해결법은 많은 비용과 긴 기간이 소요되고 합의에 의한 해결가능성도 적은 법정소송 대신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채택과 관련된 것인 반면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은 규칙제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형성을 중시한다.

1) 행정분쟁해결법(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행정분쟁해결법은 연방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종래의 값비싸고 대결지향적인 분쟁해결방식을 지양하고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법 사용을 의무화한 법으로 각 기관의 고위관료를 분쟁해결전문가(Dispute Resolution Specialist)로 임명하고 화해(conciliation), 조정(mediation), 합의촉진(facilitation), 사실확인(fact-finding) 등의 ADR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분쟁해결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관료들에게 정규적인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 협상, 조정, 중재를 비롯한 ADR 기법을 교육시킬 것도 명문화하고

1) 박흥업, 2005. 「국내외 갈등관련 법제도 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29쪽 참조.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ADR의 활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ec. 3).

2)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은 정부가 규제 관련 규칙을 최종적인 제안형태로 만들기 이전에 그 규칙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합의를 형성하려는 자발적인 과정에 관한 법이다. 정부도 이해당사자 가운데 하나로 참여하게 되지만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위원회의 구성과 공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위원회 참여 신청, 위원회 운영 및 종결 등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담당한다.

비록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절차가 종래의 절차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해당 관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한 합의 형성 절차를 거쳐 마련된 규칙은 보다 분명(clear)하고 정확(accurate)하며, 구체적(specific)이어서 이해당사자로부터 반발이 적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며 규칙에 대한 순응도도 높아진다

는 장점이 있다.

2. 미국의 갈등관리 기구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정부적으로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을 지시하고 각 연방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기구를 구성해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정책갈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1) 정부기관 간 대안적 분쟁해결 실무그룹(The Interagenc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orking Group)

1998년 5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 및 기관장에게 보내는 비망록(Memorandum for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을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 및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을 정부기관이 더욱 많이 활용하도록 촉진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정부기관 간 위원회를 지정(Designation of Interagency Committees)” 한다고 알리면서 “정부기관 간 대안적 갈등해결 실무그룹”의 구성과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시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분쟁예방 및 회피(prevention and avoidance of disputes)를 포함해 가능한 한 분쟁과 쟁점들을 합의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consensual resolution)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 분쟁 해결 실(Office of Dispute Resolution)

미국 법무부의 분쟁해결실은 법무부의 ADR 활용을 조정하고 ADR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ADR에 관한 교육 훈련기능, 어떤 사건들에 분쟁해결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변호사들에게 알려주고 지원하는 기능, 조정자 및 중재자 명부관리기능 등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어 검찰총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 간 대안적 분쟁해결 실무단(Interagency ADR Working Group)을 조정하면서 연방정부 기관의 ADR 활용을 관장하고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각 정부기관의 ADR 활용 실적 및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3) 갈등 예방 및 해결 센터(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Center, CPRC)

미국 농림부와 환경보호청의 ADR을 이용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기구이다. 미국 농림부의 CPRC는 갈등관리에 대해 “갈등을 분별 있고(sensible), 공정하며(fair), 효율적인(efficient) 방식으로 파악하고 처리하는 절차”로 정의하면서 “갈등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그리고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협상과 같은 기술을 개발,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갈등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ADR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아울러 갈등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ADR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ADR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 가) 관계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때
- 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이 도움 된다고 판단될 때
- 다) 제3자의 개입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때
- 라) 이해당사자 간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 마) 비밀유지가 중요할 때
- 바) 결과를 통제하고 싶을 때
- 사) 시간요소가 중요할 때

4) 미국환경분쟁해결원(U.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환경정책 및 갈등해결법(Environmental Policy and Conflict Resolution Act of 1988 P.L. 105-156)을 근거로 설치된 연방 환경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기관이다. 주로 전문적인 지식(expertise)과 지도(guidance), 그리고 환경영향분석, 합의촉진, 조정 등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면서 전국적인 프로그램과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동, 그리고 정책대화 등과 같은 합의형성에 기반을 둔 절차의 운영과 관련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5) 연방조정알선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FMCS)

연방조정알선청(이하 FMCS)은 1947년 제정된 노사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of 1947, Taft-Hartley Act)에 의해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조정과 화해 그리고 자발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 자유로운 경제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FMCS의 설립목적이었다. 주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6) 지역사회 갈등해결센터(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주(states) 차원에서는 주정부나 주의회 혹은 주 법원 산하에 분쟁해결실(Office of Dispute Resolution)을 설치하여 ADR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갈등해결센터에서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Community Dispute Resolution Program)을 운영해 갈등관리에 나서고 있다. 각 주마다 조직과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연방정부의 갈등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ADR의 교육훈련, 분쟁해결 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그리고 조정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안전부갈등업무 소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수렴·전파,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력 및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력 및 분쟁 조정업무는 1992년 10월 30일 「광역행정과」가 신설된 이후, 1994년 12월 「행정과」, 2004년 4월 「평가조정과」를 거쳐 2008년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이행하게 되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인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간 인적·물적교류 확대와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자치단체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은 관할구역 위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에 젖어 있어, 행정의 광역적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체육관 등 선호(PIMFY)시설은 경쟁적 추진으로 과잉투자가 발생하는 반면, 화장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비선호(NMBY)시설은 기피경향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소투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자치단체간 협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등 관할구역 중심의 사업추진에 따라 자치단체간 분쟁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민선 이후부터 '07년까지 연평균 16.6건 발생하였으나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발생한 자치단체간 분쟁은 장기·고질화 경향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은 중앙과 지방간, 지방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결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더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행정의 능률성·경제성·효과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제도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는 광역행정 협력활성화 및 갈등·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광역행정 협력 활성화 방안의 체계적 추진을 들 수 있다. 최근 황해 및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승인해 주는 등 현재 전국적으로 8개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스스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 사무위탁 및 행정협의회의 설립·운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고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간, 지방상호간에 발생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07년 국방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있었던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협의·조정하고 올해 2년 임기의 신규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상호간 업무처리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00.4월 이후 총10건을 접수하여 9건을 처리하였고 1건이 계류중에 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 등 광역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실태분석 및 협력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자치단체 관련 갈등을 실질적·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중앙과 지방간, 지방상호간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설명〉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최병학 운영위원장 겸 사무국장과 이준건 사무차장은 10월 10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최병록 사회통합정책실 사회문화정책관과 정영주 정책기획실 갈등관리기획과장 송기진사무관을 만나 포럼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를 방문, 천영성 사무관과 전태진씨를 만나 2008년 사업추진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

행정안전부갈등업무 소개

□ 광역행정 주요업무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법 제147조

협력사업



법 제148조~150조

지방상호간 분쟁조정
• 중앙 · 지방분쟁조정위 ·



법 제151조

사 무 위 탁
(시도 → 행안부 보고)



법 제152조

행 정 협 의 회
(시도 → 행안부 보고)



법 제159~164조

지방자치단체 조합



법 제165조

지방4대협의체

국가의 지도감독

법 제166조

자치단체의 사무지도 · 지원
(재정 + 기술지원)



법 제167조

국가사무의 지도 · 감독



법 제168조

중앙 · 지방 협의조정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법 제169조

위법 ·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법 제17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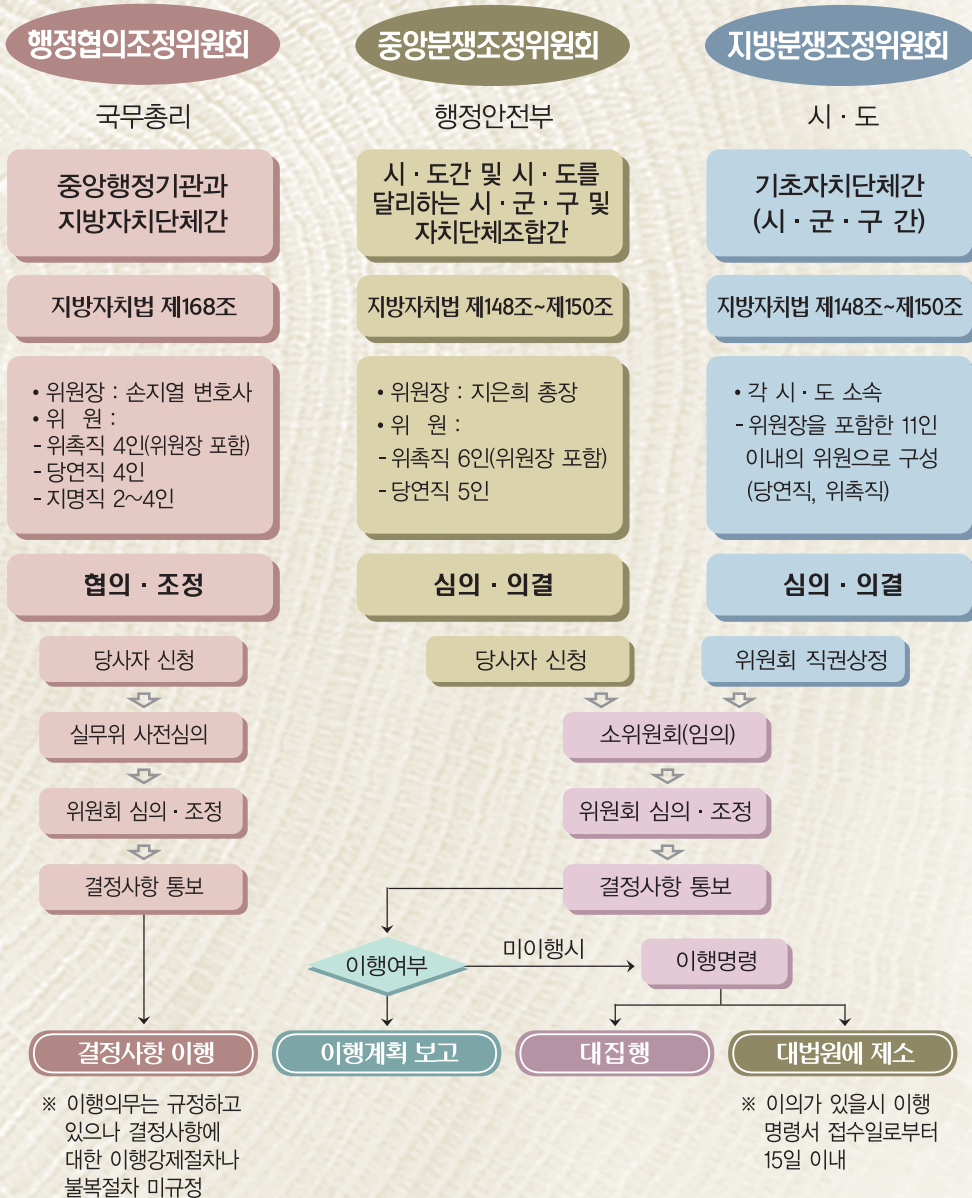
직무이행명령



법 제171~172조

지방감사, 지방의회
의결 재의 등

□ 갈등·분쟁 조정운영 추진체계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을 통한 전국 제1의 상생협력·갈등관리 道 구현



최 병 학 | 본 포럼 운영위원장

■ 2008년도 사업추진중점

-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라는 지렛대 효과의 최대한 활용
- 명실공히 민관협력 포럼으로 전환, 학습공동체 지향
- 지속적 회원관리 및 정책피드백으로 포럼 활성화 도모
- 타 시·도에겐 벤치마킹을 도와주어 포럼 위상 제고 전략
- 지역원로 DB구축 관련 인력 Pool을 통한 연대강화 전략
- 회원의 자발적 참여는 ‘자기발전’이라는 인식확대 전략

▶ 추진경과

○ 포럼은 기본사업으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갈등현장 조사탐방, 연구조사 사업의 지속적·연속적 추진, 갈등관리를 주제로 한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대회 개최, 갈등대응·강화를 위한 ‘충남갈등맵(CCM)’ 제작 및 활용, 충남 권역별 포럼 지원사업 전개, 포럼 활동의 대외협력 강화 및 외연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제1차 임시총회(운영위원회) 및 4대 권역별 포럼 협의회 개최결과

- 임시총회 및 4대 권역별 포럼 협의회를 개최하여, 포럼의 2008년 주요사업내용 협의, 정관 및 직제개편, 4대 권역별포럼과의 업무연계 및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 2008년 8월 13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참석자 총 30명, 공동대표, 4대 권역별 포럼대표 및 운영위원장,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결과

○ 편집위원회에서는 정책포커스 창간호 발간 취지, 주요내용 경과보고, 발간 일정 및 책자 디자인 등이 논의했다.

○ 2008년 8월 19일 충남발전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참석자 총 8명,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이 참석하여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 제1차 세미나 개최결과

○ 제1차 세미나는 2008년 8월 22일에 한국NGO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포럼의 제1기 공동대표단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충남지역문제의 해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는 “NGO 정부와 정부간의 협력모형 탐색”(박상필 교수), “소통, 대안, 합의형성을 위한 공공갈등관리모델의 탐색”(박홍엽 박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결행동연구”(배용환 박사), “충남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임정빈 박사), “충남지역 협력사례를 설명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김 옥 교수),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구간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부-NGO 협력모형 연구”(김종남 사무처장)의 순으로 진행했다.

▶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결과

○ 편집위원회에서는 정책포커스 창간호 발간결과 보고, 제2호 주요내용 경과보고, 발간 일정 및 책자 디자인 등이 논의했다.

○ 2008년 9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참석자 총 8명,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이 참석하여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 제2차 운영위원회 및 4대 권역별 포럼 협의회 개최

○ 제2차 운영위원회 및 4대 권역별 포럼 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포럼 사업 현황



충청남도 정책포럼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안전 협의(4대 권역 포럼), 상생협력·갈등관리 관련 정책자료 활용방안을 설명·전달했다.

○ 2008년 10월 30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참석자 총 30명, 공동대표, 4대 권역별 포럼대표 및 운영위원장,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 상생협력갈등관리 국내 벤치마킹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경주시청 방문)

○ 상생협력·갈등관리 벤치마킹 현장학습을 위해 11월 13일~14일 이틀간 포럼임원·권역별임원 시·군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주시청, 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등을 돌아봤다.



▶ 향후 추진계획

○ 11월 26일(수) 제1회 전국 대학(원)생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현재 논문을 모집중이며 심사위원으로 국무총리실 송기진 사무관, 행정안전부 청영평 사무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박홍엽 박사, 충주대 홍민기 교수, 중도일보 김학용 논설위원 등 전국 대학 교수님 10여명을 위촉했다.

○ 12월에는 기획연구 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갈등업무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말 정기총회 및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2007년도 사업추진

▶ 제1차 정기총회 개최

○ 2007년도 제1차 정기총회는 2007년 5월 23일 유성 스파피아호텔 5층 무궁화홀에서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정종제 팀장(부이사관) 외 포럼회원(충남 16개 시·군 갈등관리책임관 포함) 약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총회에서는 창립총회 자료집(I), 정책학술 자료집(II) 발간 및 배부,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 이론과 실제, 연구사례집」 책자 배부, 2007년도 사업방향, 임원진 변경, 포럼운영 전담 「사무국」 설치·운영(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겸임 가능), 포럼 홍보가능 강화와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및 시연, 5개 분과모임(교육연구,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갈등분석 및 평가연구, 갈등협상과 조정연구, 갈등사례연구)을 통한 회원관리 내실화 방안 집중 논의했다.

▶ 제1차 워크숍 개최

○ 제1차 워크숍은 정기총회 개최 직후, 발제자로 정종제 팀장(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팀), 박태순 박사(사회갈등연구소장), 최진하 처장(푸른충남21 사무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최한규 교수(단국대), 최호택 교수(배재대), 성태규 박사(충남발전연구원), 김병빈(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지훈(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 한창숙(충남새마을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 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상생협력·갈등관리 기본정책 방향”(정종제 팀장), “한국 사회 공공갈등관리 해결방안”(박태순 소장), “가야산 분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개발사업의 갈등원화 방안”(최진하 사무처장) 순으로 진행됐다.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제1차 운영위원회의 개최목적은, 현단계에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포럼운영을 위해 임원 및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폭넓은 의견교환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포럼 운영상 현안문제(분과별 모임 활성화, (가칭)갈등원화지원자 문단 구성, 회원확충, 대외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 운영위원회는 2007년 7월 11일 충남발전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참석자 총 27명, 공동대표, 감사, 사무국, 운영위원, 분과별 위원, 道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 제2차 워크숍 개최

○ 제2차 워크숍은 2007년 8월 20일에 한국국제정치학회(충청지회)와 공동개최 되어,

충청남도 정책포럼사업

사회갈등연구소(박태순 소장)와 MOU체결을 하고, “상생협력 · 갈등관리와 사회자본의 육성”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 발제는 “충남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육성”(최정진 박사),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 : 충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김 욱 교수), “상생협력 · 갈등관리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중요성과 의의”(이병희 교수) 순으로 진행했다.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목적은, 현단계에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포럼운영을 위해 임원 및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획과제 공모를 통한 포럼 연구 기능 강화, 포럼조직 및 활성화 방안, 회원확보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 운영위원회는 2007년 8월 20일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참석자 총 23명, 공동대표, 감사, 사무국, 운영위원, 분과별 위원, 道 관계관, 공동주관대표 등이 참석하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 제3차 워크숍 개최

○ 제3차 워크숍은 2007년 11월 2일에 사회갈등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환기 지방정부 갈등이슈와 해법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남 4대권역별 갈등관리포럼 중 중부권역 포럼의 창립총회와 병행 개최됐다.

○ 발제는 “지방정부 갈등현안과 해결의 기본방향”(박태순 소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갈등해소방법으로서의 Policy Dialogue”(이선우 교수), “갈등이슈지역에서 갈등당사자들의 입장차이”(최진하 단장) 순으로 진행했다.

▶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 제3차 운영위원회의 개최목적은, 일반대중 및 학생들에게 상생협력 · 갈등관리의 관심제고를 위한 참신한 아이템 발굴, 2008년도 포럼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 운영위원회는 2007년 11월 2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공동대표, 감사, 사무국, 운영위원, 분과별 위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 제4차 운영위원회는 2008년도 사업추진 방향 논의가 중심이 되어,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건, 연구조사사업의 건, 분과 및 전문위원회 단위별 사업구상 및 계획에 관한 건, 직제 확대 개편 및 임원 개임에 관한 건, 회원확보 및 관리·확충에 관한 건 등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 운영위원회는 2007년 12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동대표, 道 관계관, 운영위원, 분과별 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제4차 워크숍 개최

○ 제4차 워크숍은 2007년 12월 13일 한국공공행정학회 및 한국행정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양 기관은 MOU를 체결했다.

○ “지방정부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곽현근 교수),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와 시민사회의 역할”(박수정 실장)의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상생협력 갈등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이 이루어졌다.

■ 2006년도 사업추진

▶ 창립총회 개최

○ 포럼의 창립총회는 2006년 10월 30일에 대전 유성의 베스트 웨스턴 레전드호텔에서 행정부지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재묵 교수(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준비위원장), 이재철 서기관(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권경득 교수(한국공공행정학회장)를 비롯한 갈등전문가, 학계, 연구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사회봉사단체 및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시·군 공무원(갈등관리책임관) 외 타시·도 참관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 특히 여기에서는 포럼정관 심의·의결, 임원선출, 창립선언문 낭독 등이 있었고, 기조 강연으로 박재묵 교수의 “전환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및 이재철 서기관의 상생협력·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초청강연을 통해 포

충청남도 정책포럼사업

럼창립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 제1차 워크숍 개최

○ 제 1차 워크숍은 포럼창립행사 개최 직후에 5개 연구모임별 분과위원회로 회의진행을 하면서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이는 포럼창립 단계임을 감안하여 분과모임별 주요이슈와 향후 분과모임별 진행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 평가 및 시사점

○ 포럼의 창립총회 및 제1차 워크숍 개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청남도과 행정자치부의 후원 속에 전국 최초로 개최한 것이며, 각계각층에서 모인 포럼회원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회로 공동대표단 구성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여 주목을 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구성, 재원확보, 포럼운영의 제도적 정비, 충청남도과 16개 시·군간의 연계·협력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적극적 후원과 포럼회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절실함을 느꼈다.

■ 포럼 운영현황

▶ 설치근거

○ 포럼의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6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2007. 5. 11, 총리령 제847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2005년 6월 국회상정 후 현재 계류 중) 등이며, 이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주관기관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지정(2006. 7) 및 포럼정관 개정(2007. 5. 23)에 따라 전담 「사무국」 설치를 완료했다.

▶ 추진경과

○ 포럼의 추진경과는 2006년 3월에 공공갈등관리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자체별 공공갈등관리책임관 지정·운영, 시·군별 갈등관리책임관 지정(시·군 부단체장 16명), 2006년 5월에 공공갈등관리책임관 지정·운영 등 네트워크 구축 강화, 「상생협력·

갈등관리 정책포럼」 및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세부추진계획 시행 착수, 2006년 9월에 공공갈등관리 담당공무원 역량제고 워크숍 업무연찬 실시, 공공갈등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는 2005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또한 2006년 9월 「상생협력·갈등관리 정책포럼 창립총회」 개최계획 수립을 토대로 10월에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확정하였으며, 2006년 10월 30일에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2006년도 1차 워크숍 개최와 함께 임원진을 구성했다.

○ 2007년 4월 30일과 5월 2일에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및 연구기획과제 발간·배부 사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루어졌다(각각 4,000만원, 2,000만원).

○ 이에따라, 2007년 5월 23일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2007년도 제1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워크숍 개최되었으며, 7월 11일에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2007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월 20일과 11월 2일에는 각각 제2차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 제3차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2월 13일에는 제4차 워크숍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07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관련 재정인센티브를 받음으로서, 2008년 6월 2일 2008년도 예산 1억 5천만원을 전액 교부받았다.

○ 이에 2008년도 상생포럼은 워크숍개최, 연구조사사업, 충남갈등맵 구축, 상생·갈등 관련 대학(원)생 전국 논문경시대회, 국내외 벤치마킹, 대외홍보사업, 교육연찬사업, 권역별 포럼 운영 지원, 정책포커스 발간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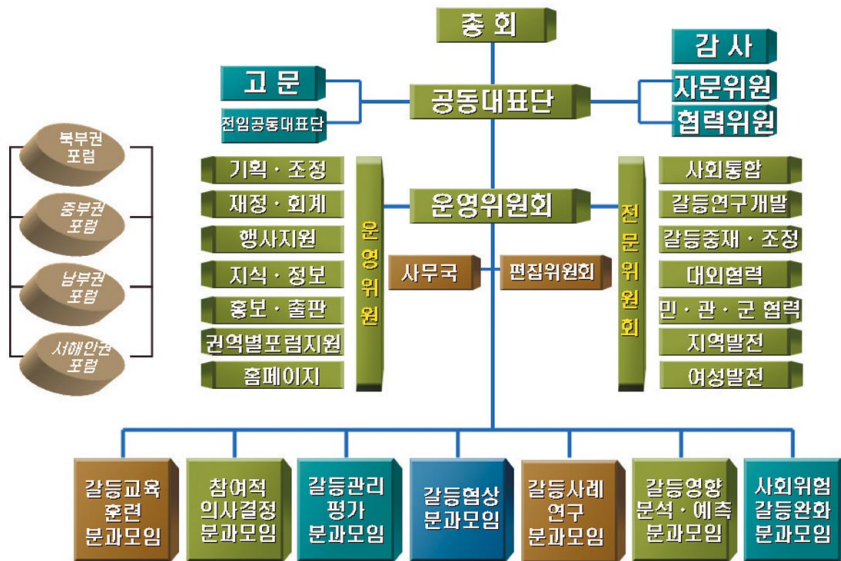
○ 포럼의 기능 및 역할은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및 각종 갈등유발 대상 및 주체들의 갈등을 보다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며, 상생협력 및 갈등완화 관련 교육사업, 연구사업, 실천적 지원사업을 각계각층의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며, 특히 포럼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홈페이지 활용, 포럼 회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충청남도 정책포럼사업

경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조직구성

포럼의 최근의 조직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 포럼의 조직은 총회를 중심으로 고문, 공동대표단, 전임공동대표단, 감사, 자문위원, 협력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회, 분과모임으로 구성했다.

○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은 기획·조정, 재정·회계, 행사지원, 지식·정보, 홍보·출판, 권역별 포럼지원, 홈페이지구축 등 7개 분야로 나뉘었으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사회통합, 갈등연구개발, 갈등중재·조정, 대외협력, 민·관·군 협력, 지역발전, 여성발전 등 7개 분야로 구성하여 포럼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 갈등교육훈련, 참여적의사결정, 갈등관리평가, 갈등협상, 갈등사례연구, 갈등영향분석·예측, 사회위험갈등완화 등 7개의 분과모임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상생협력·갈등관리에 관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갈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넘어 이웃과 함께”

- 대전+인근 8개 시·군 공동발전 협의체 운영 -

I. 사업개요

1. G9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목적

대전광역시와 연접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인 대전광역도시권인 G9¹⁾의 추진은 도시 또는 지역이 새로운 경제단위로 부상하는 추세이고, 지역 스스로 특화된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행정구역이 도시 기능적 공간범위와 불일치하여 광역행정수요에 적극 대응치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인구·경제활동 등이 행정구역 공간범위를 넘어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해부터 「G9 프로젝트」를 추진, 대전광역시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연접 8개 시·군이 지역의 공동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획일적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 G9 지자체 현황과 연관관계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러한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행정 수행을 통해 지역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역의 공동발전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광역도시권의 기본현황과 인접 시·군과의 연관성을 조사(’07. 3.)하게 되었다.

1) G9 (9개의 Group)은 대전대도시권 내의 대전광역시(5개구 포함) + 연접 8개시·군(보은, 옥천, 영동,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정책포럼사업

가. 대전광역시도시권의 공간기능

대전광역시도시권의 G9은 <표 1>와 <그림 1>와 같이, 중심생활권이 대전을 비롯하여 6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며, 각각 특성을 반영한 기능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나타나 있다.

<표 1> 대전광역시도시권의 생활권으로 구분

구 분	해당도시	기 능
중심생활권	대 전	국가행정, 과학기술, 업무, 금융의 중추기능 강화 및 대전광역시도시권의 중심도시기능 확충
동부생활권	옥천, 영동	물류·유통, 과학영농, 묘목·약초단지
서부생활권	공 주	역사, 문화, 관광, 생태농업
남부생활권	금 산	인삼 관련 산업, 농산물 물류유통, 생태산업
서남생활권	계룡, 논산	첨단산업, 근교농업, 관광휴양
북부생활권	연기, 보은, 청원	전원주거, 체류형 관광산업, 지식정보서비스 지원

나. 대전광역시도시권역내 연관성

대전과 인근 8개시·군은 광역도시계획상 같은 생활권이며 많은 연관성이 있다.



<그림 1> 대전광역시도시권(G9) 지리적 위치

1) 대전→인접 시·군간 통근·통학 인구수

대전에서 인접 시·군으로 통학·통근자 수는 약 4만명으로서 양방향 고려시 약 2배인 1일평균 약 8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대전 → 인접 시·군간 통근·통학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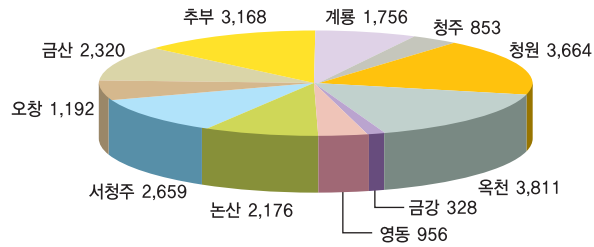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계	금 산	논 산	공 주	옥 천	청 원	계 룡	연 기	보 은	영 동
대 전	42,806	7,709	6,856	6,676	4,508	7,970	3,918	3,861	311	997

출처: 통계청 (2005년 인구가구 총 조사 자료 KOSIS), 청원에 청주포함

2) 대전 → 인접 시·군 고속도로 통행량

대전에서 인접 시·군 고속도로 통행량은 약 2만3천대로서 양방향 고려시 약 2배인 1일평균 약4만 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대전 → 인접 시·군간
통근·통학 인구수

〈표 3〉 대전 → 인접 시·군 고속도로 통행량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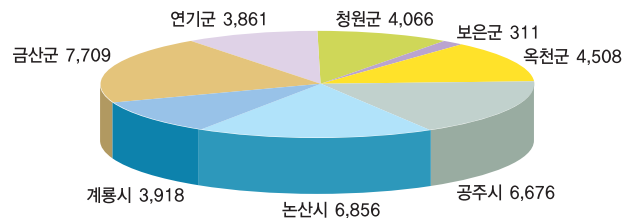
구 분	계	계룡	청주	청원	옥천	금강	영동	논산	서청주	오창	금산	추부
대 전	22,883	1,756	853	3,664	3,811	328	956	2,176	2,659	1,192	2,320	3,168

출처: 한국도로공사(2006년기준 1일평균)〈그림 3〉대전 → 인접 시·군 고속도로 통행

3. 협력구상의 배경과 목적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와 인근의 8개 시·군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구역이 도시 기능적 공간 범위와 불일치하여 주변의 자치단체와 함께 다루어야 할 도로·교통, 환경 등 광역행정수요에

적극 대응치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으며, 특히, 현대사회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구·경제활동 등이 행정구역 공간범위를 넘어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행정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시 중 행정구역상 郡(군)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대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보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현재 대전시 자체적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토지자원의 활용 등에 대해 인근 시·군과의 협력과 상생의 모색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3〉 대전 → 인접 시·군
고속도로 통행량

대전광역시 정책포럼사업

II. G9 협력 추진실태

1. 추진경과

대전대도시권 G9은 <표 4>와 같이, 2007년 3월에 추진을 위한 구상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현재 대전광역시와 인근 8개(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연기군, 보은군) 자치단체가 공동발전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이며²⁾, 그동안 2차례의 실무협의회 개최와 기관장 회의를 통하여, 협력을 위한 보다 진전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협력제안 초기에 인근 시·군에서는 대전시의 협력의사 및 제안에 대해 경계의 시각이 있었으나, 대전광역시장의 서한문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재전 인근 시·군 향우회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시·군의 참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2. 협력의 틀 및 협력분야

대전대도시권 G9 협력의 틀은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자치단체간 협약(MOU)을 근간으로 협력의 창구는 참여기관별 기획부서로 지정하였으며, 실무협의회(기관별 기획부서장 위원, 분기 1회), 기관장회의(연 2회)를 통해 협력과제의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협력분야는 도·농간의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9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참여기관의 창의적인 개별 사업 발굴 및 제안을 권장하고 있다.

<표 5> 협력 9개 분야

- | | |
|-------------------|-------------------------|
| 1.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2. 도로 시설·대중교통수단의 확충 |
| 3. 문화·관광벨트 조성 추진 | 4. 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
| 5. 특·농산품의 직거래 활성화 | 6. 다양한 도·농 교류 지원 |
| 7. 자연환경 보호, 방재 | 8. 연접 자치단체간 공동협력 활성화 |
| 9. 기타 필요 사항 등 | |

3. 과제발굴 및 추진상황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20개의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계룡시가 제안한 1개(상수도 공급요금 협약체결)의 과제는 이미 추진이 완료된 상태이다.

2) 청원군은 군차원의 MOU를 체결하지는 않고 있지만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개별사업에 대하여 G9에 참여하고 있다

4. 2008년 추진

2008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G9협력 주요사업은

- ① 대전 광역생활권으로서 G9 개별사업(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기관장회의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청원군을 포함하는 G10 프로젝트 추진 (기존 9개 자치단체 + 청원군)
⇒ 인접 대덕구와 재전 청원군 향우회 등 협조 및 참여분위기 조성
- ② 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 운영
 - G9 공동 CI · 슬로건 개발, 시·군·구 공무원, 의원 간 교류협력 증진 향우회원 참여 시·군의 날 합동운영 등
- ③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추진
 - 화장장 공동건립 협의, 농·특산물 판로지원, 시내버스 노선연장(조정) 등 실질적이고도 지역민들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시민편의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2007. 5. 3. 11:00.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5층) - 대전시와 연접한 8개 시·군 단체장의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약정 조인식” 전경 사진(왼쪽부터 이기봉 연기군수, 이항태 보은군수, 정구복 영동군수, 최흥묵 계룡시장, 박성호 대전시장, 한용택 옥천군수, 박동철 금산군수, 전기업 논산시 자치행정국장, 전선규 공주부시장).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약정 조인식” 회의 모습

수도권 상생협력 모델,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시행

경기도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하여 작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버스, 전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 간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환승요금제도로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요금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08년 9월 20일부터는 경기 좌석버스(좌석형, 직행좌석형) 2,038대, 서울 광역버스 411대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환승 시 요금부과의 기본 틀은 기본구간 내 이동시는 기본요금만, 기본구간을 초과한 이동거리에 대해서는 매5km마다 100원의 요금을 부과하며, 기본구간은 통상 10km로 하나 상대적으로 탑승거리가 긴 좌석(광역)버스를 이용했을 경우는 30km를 적용한다.

또한, 금번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 시행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부 불합리한 노선의 조정과 경기-서울간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차내 혼잡문제 개선을 위해 경기 지역에서는 3~4개 정류소만 정차한 후 서울 도심까지 급행으로 운행하는 15개 간선급행버스(8000번대)를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에 맞춰 용인·성남·파주 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작년 7월1일 시행한 후 곧 바로 좌석(광역)버스 확대 추진을 결정하고 서울시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었다. 기관 간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대의에는 기관들이 의견을 같이하였는바, 이를 위한 이해 설득과 양보가 있었기에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통합요금제가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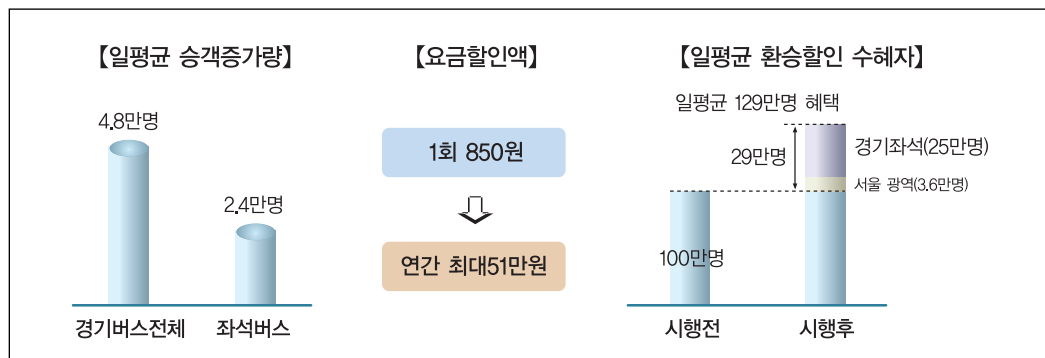
다른 기관과는 달리 좌석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고자 했던 경기

도는 그간의 경험, 전문성, 가용인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환승요금체계, 환승손실금 부담기준, 정산시스템 개발방안, 시·도 유출입 노선별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제시하여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2007년 7월 1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1년 2개월 만에 좌석(광역)버스 통합정산시스템 개발과 함께 쉽지 않은 협의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참여 기관 간 분야별 협의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 9월 2일 경기도, 서울시, 철도공사의 기관장이 모여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2008년 9월 20일부터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공동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좌석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큰 장애없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업성과와 주민들의 호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할인혜택을 받는 일평균 약 100만명 이외에 급변 좌석버스 확대 시행으로 좌석(광역)버스를 이용하여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일평균 약 29만명이며, 이중 경기 좌석버스 승객은 25만명(86%), 서울 광역버스 승객은 3.6만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 좌석버스는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이용 승객이 5%(2.4만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승객증가 효과 이외에 환승통행당 할인효과는 평균 850원 정도로 월25일 출퇴근 이용시 연간 약 51만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요즘같이 어려운 고환율, 저성장 경제상황 속에서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좌석버스 환승할인 확대 시행 효과



또한, 환승할인 확대 시행과 더불어 운행을 시작한 15개 간선급행버스(8000번대)도 기존 노선에 비해 운행시간이 평균 25분 정도 단축되어 이용승객들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줄었으며, 간선급행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탑승객

경기도 정책포럼사업

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약 81%가 만족하고 있고 확대 시행에는 92%가 찬성하며 응답자들의 94%가 출퇴근 시간이 단축(전체 응답자의 45%는 평균 11~20분 단축)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응답자의 95%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해, 주민들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하고, 쉽게 체감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응답자의 35%의 응답자가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고 자가용 이용이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6%에 달해 도민들의 출·퇴근 통행패턴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서도 9월초 하루 평균 약 291만대에 달하던 경기~서울간 유출입차량대수는 좌석버스 환승할인 확대 시행 후 287만대로 줄어 하루 평균 약 3만8천대 가량의 차량통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류비는 연간 약 490억원, 온실가스(CO2) 배출은 연간 약 7.2만톤의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버스는 좌석버스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완성되었지만, 좀 더 빠르고,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환승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번 통합요금제에 참여하지 못한 인천버스와 수도권 통합요금제 연계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적극 협력할 뿐만 아니라, 간선급행버스 추가 확대, 실시간 버스이용정보 서비스 확대, 버스 고급화 사업, 정류소 시설 개선 및 환승센터 구축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경기도·서울시·한국철도공사 간 좌석(광역)버스 확대시행 공동협약체결식('08.9.2)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의 배경과 향후과제

■ 추진배경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군사시설(훈련장, 진지, 군부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와 제한, 이와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 제



한으로 인한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된 지역으로 인구감소, SOC투자 후순위 배정, 민간투자 위축 등 지역발전 저하의 악순환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듯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임에도 그동안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의 극복을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가 그 뜻을 모아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엽적인 지역발전을 떠나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건의 등 공동사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추진현황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접하여 있는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경기도 파주, 김포시,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 용진군의 10개 시·군 접경지역 시장·군수로 구성, 지난 08.4.28일 창립(초대회장 철원군수 정호조)하였으며, 접경지역지원

강원도 정책포럼사업

법의 특별법으로 격상과 지역의 각종규제 완화, 각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한 SOC지원 등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 협의회 구성경위 및 그동안 활동내용

- '07.10.18 / 접경지역 시장·군수초청 간담회
- '07.10.29 / 접경지역 시장·군수 간담회
- '08. 4.28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
- '08. 7.31 / 접경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간담회
- '08. 8.11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협의회
- '08. 9.11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명의 건의문 제출
 - 신병교육대 외박허가 건의문(국방부,육군본부)
- '08.10.15 / 접경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장·군수 공동명의 서한문 제출
 - 접경지역지원사업 개선 건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08.11. 3 / 접경지역 10개시군 공동발전방안 연구 착수
 - 국토연구원+3개광역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수행

■ 향후추진과제

협의회는 그동안 민선자치를 통하여 축적된 지방의 역량과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노력으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접경지역이 더 이상 한반도의 오지가 아닌 새로운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희망의 땅,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공동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과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접경지역의 권익을 찾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경남·부산·전남의 남해안지역 3개 시·도가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관광, 산업, 물류 등에서 남해안이 가진 확고한 기반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남해안 지역을 수도권과 상응하는 “남해안 해양경제권”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발원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국가성장 전략이다. 또한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 경남이 먹고 살아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경남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창출로 우리나라를 한단계 Up-grade 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2004. 11. 17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시정연설시 김태호 지사의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 제안을 시작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주창되었으며,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2007. 12. 27 공포되면서 남해안시대 구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2005. 2. 4 경남 통영에서 ‘3개 시·도 남해안시대 공동선언’ 이후 3개 시·도는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쳐 운영하며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왔다. 각종 세미나·심포지엄·공청회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해안시대의 당위성 및 미래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현재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정은 대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06년 9월 남해안발전특별법 국회 발의 이후 약 15개월만에 거둔 성과로써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에서 입안한 법안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 법 제정에 이르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어 진정한 지방화·도시화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경상남도 정책포럼사업



과거에는 인접한 지역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했고, 인접한 지역의 성공은 곧 자기 지역의 실패로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계획을 행정구역 내로 한정해 수립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접한 지자체

가 잘 살고, 좋은 일이 많으면 자기 지역에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인접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협력과 연대 전략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으로 오늘날 지역개발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끈질긴 노력 끝에 이루어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 7대 경제권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어젠더로 채택되어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에 항만과 물류사업, 해양산업, 첨단형 IT 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해서 남해안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발전축으로 육성시켜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공간으로 발돋움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먼저 통과된 특별법 절차에 맞추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작성과 개발구역을 지정하며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남해안 개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가시화될 것이다.

이에 3개 시도는 국토연구원에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기관에서는 첨단산업, 문화관광, 항만물류 및 인프라, 농수산업, 마케팅, 환경의 6대부문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10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의 남해안, 동북아시아에 갇힌 남해안이 아닌 세계속의 남해안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또한 새 정부는 지난 7월에 지역발전정책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의 하나로 '남해안 선별

트 구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남해안 선벨트 구상은 우리 도의 남해안시대의 철학과 정책방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이 가일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경남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의 발원지가 될 것이며, 남해안권은 수도권에 대응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끌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이다. 목표연도인 2020년 1인당 GRDP는 40,000\$ 이상을 달성하여 동북아의 7대경제권으로 진입하게 되며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한반도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남해안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백년 대계를 세우는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개 시도는 더욱 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이미 구축된 법적·제도적 기반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아래서 하루라도 빨리 「남해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상생발전 성공요소와 전제조건



최 정 진 박사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근에 공공기관 관련 각종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한번 표출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양상까지 보이면서, 이로 인한 재정적 낭비초래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발생한 갈등의 대부분이 단순 사안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며, 당사자간 갈등에서 다자간 갈등·분쟁으로,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만큼, 갈등·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 분쟁이 현재화 된 후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중재 및 조정방안을 선택하여 상생과 협력을 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간 상생발전 성공요소

지역간 상생발전의 성공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적정한

경제통합규모와 단일 경제권으로서의 네트워크이다. 구체적으로 상호이해와 신뢰 기반, 기존의 네트워크 경제, 공동의 자원을 협동하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규모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일정 규모의 최소기준을 극복하는 것, 통합적인 접근방식에 의해 범위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 다양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 지역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규제함으로써 경제적 갈등을 피하는 것, 개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둘째, 정책수단으로서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역 및 중앙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정책의지이다. 행정 및 재정적 투자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며, 행정의 리더십과 정책의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 및 재정비용의 부담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요구와 의지가 부족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50개가 넘는 도시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참여지역의

적극적 정책의지가 부족했던 것을 하나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통의 정체성 확립 및 공동목표 정립이다. 지역간 상생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의 인식확대와 지역 상생에 대한 공감대 확보, 지역간 상생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비용부담 감수를 지역간 상생발전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다. 성공가능성 높은 협력사업의 선정, 인식의 전환과 리더십, 수평적 파트너십과 명확한 역할분담, 협력성과의 가시화 및 공유, 경쟁요인의 제거와 조정기능 강화, 제도적 지원의 6가지 요소가 지역간 협력에 필요하다. 그 가운데 성공가능성 높은 협력사업의 선정 및 인식의 전환, 명확한 역할분담, 협력성과의 가시화 및 공유는 공통의 정체성 확립 및 명확한 공동목표 정립과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통합된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설치이다. 공통의 정체성 확립 및 공동목표를 달성해가기 위해서는 통합된 의사결정기구의 설치가 중요하다. 기존의 지역간 협력에 대한 논의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추진기구 및 의사결정기구의 존재이다. 공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명확한 공동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으로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조직의 설치, 지자체간 다양한 행정협력제도의 도입 및 활용,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의 활용,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지역간 협력법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제성을 보유한 지역간

협력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지역간의 합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은 지역간 협력의 성패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광역혁신체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들은 상이한 법률체계, 규칙, 규정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역간 문화의 차이, 비대칭적인 정보 등이 지역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므로 통합된 의사결정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다양한 주체들로 하여금 지역의 변화와 구조변경을 도모하도록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기구의 조직은 클러스터 발전의 전제조건에 해당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다. 중앙정부는 공동사업의 지원,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당사자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과 이해의 상충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가 및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지역통합을 유도하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사업의 직접적 관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에 치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투융자 심사 우대 등 차등지원을 적극적

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규모의 경제를 요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장 협의체 등 자치단체 위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간 협력·제휴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자본 형성 방안의 전제조건

충남지역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 고객에서 시민으로의 인식 전환이다. 즉 역동적인 시민의 참여가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 또는 공중을 단순히 고객 또는 소비자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시민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을 사적 이해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구매자(customer) 또는 고객(client)으로 보지 않고 공익과 장기적 이익을 생각하는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렇게 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파동적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통치 또는 정부 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무임승차자(freerider) 또는 감시자(watchdog)가 아닌 활동가(activist)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즉 시장 또는 행정 책임자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민위원회의 기능은 자칫 의회의원이

나 공무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는 공무원과 의원들을 설득하는 시장 또는 행정 책임자의 열성적인 노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판단하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 따라서 조정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통제자에서 조력자로서 공무원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이 지방정부 내부에서 정책입안과 집행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조력자(helpe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공공관리자를 집행자(implementer), 통제자(controller), 조력자(helper)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집행자는 정책형성에의 관여를 가능한 한 회피하며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정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 정책을 중립적 입장에서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통제자는 집행자와는 달리 정책형성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정책결과에 영향을 행사하려 노력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관리자는 상관과 의회의원 그리고 시민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특정의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비전을 강조하

기 때문에 의회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집행자와 통제자는 공공관리자의 정책형성에 영향력이라는 연속선상에서 볼 때 양 끝에 위치한다.

이 두 유형의 중간지점에 조력자가 있다. 조력자의 관심은 정책과정에서 의회의원 및 시민들 상호간에 대화와 상호작용이 용이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공공관리자는 촉진자(facilitator), 교육자, 기술자문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을 조직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킬 경우 기존과는 다른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치적인 성격으로부터 행정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시장이나 의회의원들을 주로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반면 시장이나 의회의원들을 만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민이 정책 전과정에 관여하면서 정책프로그램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상호작용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과 공공관리자들의 만남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수준으로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태도가 청원(petition)에서 협상(negotiation)으로 변화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지방정부에 접근할 경우 일반적인 특정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청원의 성격이 많았지만 시민들이 각종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의 정책형성에 직접 참여하면서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과 서비스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는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즉 정책과정에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은 정부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대안을 만들게 됨으로써 공무원들과 합의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만들기 전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의견수렴을 도모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갈등이나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간 각종 선호시설 유치경쟁은 정치적·경제적·행정적·소모전 양상으로 치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갈등의 목적이나 기능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갈등이 잘못 관리될 경우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애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거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전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정부간 자발적이고 생산적 협력을 넘어 상생관계의 구축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이의 성공은 곧 갈등의 예방 및 조기타결의 필요조건이자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조건이기도 하다.

충남북부권역 상생협력정책포럼의 운영사례 소개



최 한 규 박사

충남북부권역상생협력갈등관리정책포럼 운영위원장

I. 일반현황

1. 설립과정

- 2006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생 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탄생
- 2007년 10월 포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권역별 포럼을 구성하기로 하고,
- 2007년 11월 충남북부권역상생협력정책포럼 천안에서 창립총회 및 포럼 개최

2. 기능과 역할

- 천안시·아산시·연기군·예산군 4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구축
-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 연구, 실천적 조정과 지원 체계 구축

II. 충남북부권역상생협력정책포럼

포럼창립 취지

- 우리사회가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주권의식과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의 갈등이 증폭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전문적인 역량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상생과 협력을 위한 시민문화를 만들어 가고 공공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이의 체계적인 해결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협력의 사회통합적 기틀 마련을 위한 충남 북부권역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과보고

- '07. 10. 12 천안시에서 북부권역 갈등예방 정책포럼 구성계획을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과 협의 통보 하여 천안시11명, 아산시11명, 연기군 5명, 예산군 5명 등 총 32명이 선정 되었다.
- '07. 10. 31 천안시청에서 북부권역 갈등예방 정책포럼 창립 준비모임을 4개 시군 공동대표 및 주무팀장 등 11명이 모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였다.
 - 공동대표(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 선출, 포럼의 명칭
 - 포럼의 정관, 창립총회 및 포럼 개최 일정 등을 심의하였고
 - 분과별 운영위원은 각 시군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확정 하였으며,
- 본 포럼 창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 본 포럼을 창립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충청남도 및 도포럼, 4개시군 관계자 노고가 있었다.

Ⅲ. 사업추진 현황

2007년도 사업추진현황 : 창립총회 및 포럼

1. 행사 개요

- 2007. 11. 29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참석인원 : 약200여명 참석

2. 포럼 내용

1) 발표자 : 3명

- 김승수 :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력·갈등관리 방안
- 최병학 : 상생협력·갈등사례
- 권경득 :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협력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논문발표

2) 토론자 : 4명, 차수철, 주아영, 우무정, 최호택

○ 창립총회 내용

- 창립선언문 낭독
- 정관채택
- 임원선임 등

3. 자체 평가

- 천안시의 후원으로 성공적 개최
- 북부권역 포럼의 창립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유대감 및 관심도 향상
- 조직완성으로 포럼 사업 추진력 강화



IV. 2008년 사업 추진 실적

■ 2008년 사업 추진 계획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척율
제2차 포럼	2008.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지방정부의 협력과 갈등 ○ 장 소 : 선문대학교 ○ 참석인원 : 포럼위원 및 지역주민 약 60 명 ○ 발표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경득 : 지방정부의 협력과 갈등관리 세종시 사례 - 임정빈 :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아산시 사례 - 박홍엽 : 정부와 시민사회간 갈등과 협력조정방안 	100%
제3차 포럼	2008.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도청이전과 갈등관리 ○ 장 소 : 공주대학교 ○ 참석인원 : 포럼위원 및 지역주민 약 60 명 ○ 발표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문희 :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 강인옥 : 전남도청이전사례와 갈등관리방안 - 김진옥 : 충남도청이전신도시의 갈등대응 	100%
사례조사 사업	2008.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조사사업 - 내용 : 4개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 및 상생협력 사례 수집, 유형화 및 유형별 대응방안모색 - 참여연구진: 권경득, 임정빈, 최한규, 윤권중, 전오진 - 발표 : 11월 포럼에서 발표 	50%
홈페이지 구축 사업	2008.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홈페이지구축사업 ○ 내용 :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교환과 포럼의사업활성화 기여 ○ 진행 : 한국DB센터 구축중 	50%
제4차 포럼	2008.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행정도시와 갈등관리 ○ 장소 : 연기군산림조합 ○ 참석예상인원 : 포럼위원 및 지역주민 80 명 ○ 발표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대평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대적 의미 - 길영환 : 코칭과 커뮤니케이션 - 금창호 : 행복도시추진의 주요쟁점 	50%
연구협력 사업	2008.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지역사회전문가연구집단과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 전개, 상호양해각서체결(MOU) ○ 구성 : 한국공공행정학회(회장최병학) 한국행정사학회(회장 오열근) 연기군 	50%
제5차 포럼	2008.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 ○ 장소 : 선문대(천안) ○ 참석예상인원 : 포럼위원 및 지역주민 100 명 ○ 발표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혁근 : 수도권규제정책 : 상생의 관점에서 - 권경득 : 충남북부권역 상생협력 정책포럼의 운영 성과와 발전방향 	50%
단행본 출간사업	2008.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그동안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엮어서 단행본으로 출판 ○ 목적 : 발제논문의 휘발성 보완, 지속적 홍보 효과 	50%

■ 제2차 포럼(아산시) : 지방정부의 협력과 갈등

가. 개요

- 일 시 : 2008. 8. 28(목) 오후 2시
- 장 소 : 선문대학교(아산)
- 참석인원 : 포럼위원 및 지역주민 포럼 약 70명

나. 내용

- 발표(3人)
 - 권경득(선문대교수) : 지방정부간 협력과 갈등관리 : 세종시의 사례
 - 임정빈(선문대교수) :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 아산시의 사례
 - 박홍엽(국회예산처) : 정부와 시민사회간 갈등과 협력 조정방안
- 토론(6人)
 - 김상균 교수(백석대), 강창현 교수(단국대) 박종관 교수(백석대),
 - 유선종 정책관(아산시) 김성현 교수(공주대),
 - 김지훈 사무국장(아산시민모임)

다. 성과

- 천안아산역사명칭과 수도권전철역사명칭 사례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 모색.
- 지방정부간 갈등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3차 포럼(예산군) : 충남도청이전과 갈등관리

가. 개요

- 일 시 : 2008. 9. 26(목) 오후 3시
- 장 소 : 공주대(예산)
- 참석인원 : 포럼위원 및 지역주민 포럼 약 60명

나. 내용

- 발표(3인)
 - 강문희(방통대)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의 단계별 영향요인
 - 강인호(조선대) 전라남도 도청이전 사례
 - 김진옥(혜전대) 남 도청이전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관리
- 토론(4인)
 - 윤준상 교수(공주대), 이송희 의원(예산군의회)
 - 김영우 사무국장(늘푸른예산21협의회), 정혜경 사무장(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다.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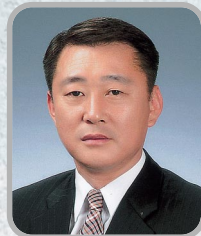
- 전라도청 이전 사례를 통해서 충남도청이전 추진과정에서 갈등상황 이해
- 충남도청이전 추진과정에서 상생협력한 두지방정부간 갈등 양상 이해



「갈등」의 매듭을 푸는 「상생」의 결정을...

이 은 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상생(相生)」, 「상생협력」, 「WIN-WIN 전략」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생은 사전적 의미로는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지만, 음양오행설에서는 “金은 水와, 水는 木과, 木은 火와, 火는 土와, 土는 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꾀하면 얼마가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 그런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상대를 누르고 이겨야만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1등 만능주의’ 때문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이기주의로 발전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KTX 역 명칭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 갈등, 이와 관련한 택시사업 구역 문제, 호남선 KTX 분기점 문제 등등... 상생의 발전은 뒤로 한 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화장장 설치 등 혐오시설과 관련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거나 표출 중이거나 수면 위로 표출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얽힌 매듭이 있다면 그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을 찾아 그 매듭을 풀면 될 텐데, 자신의 얽힌 매듭은 풀지 않고 상대방의 매듭만 풀라고 한다면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매듭을 먼저 풀고 상대방의 매듭을 푸는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관대함과 포용이 있다면 갈등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상생과 공존이라는 단어만 생존할 것입니다.

요즈음 지역 언론지상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균형 발전’, ‘제종시 설치’, ‘역 차별’, ‘지방 죽이기’ 등의 말들이 부정적인 면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갈등의 측면이 아닌 상생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지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더 가속화 되어 수도권의 비대화가 더욱 심화되는 반면에 지방의 자생력은 약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여 질 것이 뻔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 지방 죽이기’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생의 논리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자나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약자나 없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크게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와 배려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小貪大失). 개인이나 지역이나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으면 그 손해는 더욱 클 것입니다.

특히, 자치단체가 이런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작은 욕심이 아닌 큰 틀에서 보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실천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으며, 어느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명칭 문제나 행정청 소재지 문제, 주요 대단위 사업 유치 문제 등 크고 작은 갈등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의 횟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한번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는 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년, 만년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으로 상생을 위한 바람직하면서도 성숙한 결정을 내려 봅시다. 최적안을 찾아가는 슬기를 발휘하여 봅시다. 갈등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존과 상생이라는 단어가 중요시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길 기대하여 봅니다.

주민기피시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강 희 복 | 아산시장(도시계획공학박사)



인구증가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소득 증가로 인하여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방정부마다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갈등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모든 사람이 필수적 사회기반시설임을 인식하면서도 내 지역에는 안된다는 넘비적 사고로 말미암아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설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다.

쓰레기 소각장 등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설에 대한 막연한 피해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원인은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가치 손실, 환경피해 또는 오염에 대한 불안감 내재, 주변지역 용도 제한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등으로 소각장이 들어와 봐야 전혀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갈등의 요인이다.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막상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그동안 논의되었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행정에 불신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은 밀실행정으로 인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민선기관장이 선출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극렬한 양상을 띠게 되고 자치단체장 역시 차기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을 미루거나 결정된 사업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보상 수혜의 차등에 대한 불만이다. 표면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입지선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주민과 피해를 보는 주민의 의견이 서로 상

치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은 발생사태에 따라 그 원인이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주민 집단행동 사례의 공통점은 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거나 행정 편의적 관행으로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13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설치를 추진해오면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민선3기 시장에 부임한 이후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현재 입지선정을 마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시 필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건설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기피시설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핼핼(PIMFY)시설로 환영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결과 ①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② 국내외 최고의 기술을 집약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설해야 한다. ③ 입지선정지역에는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④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절차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원칙과 전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혐오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을 주선했다. 처음에는 견학을 가면 찬성하는 것으로 몰아붙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주민과의 접촉과 설득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점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예정지역 주변주민 대다수가 견학을 다녀오면서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우려에 대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도로개설과 도시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도시개발이 촉진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소각장 부지내 식물원과 장영실과학관 등 관광시설 및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가하락 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주민들과 밀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주변지역의 토지가 격 상승으로 이어져 반대민원이 자연히 해소되었다.

또한 환경피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처리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향후운영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선진시설운영사례에 대한 연구와 주민설득논리를 개발하여 홍보책자 및 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우려를 말끔히 정리했다.

아울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입지선정과정에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응모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선정과정에 응모지역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하여 회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행정기관은 협조자적 역할만을 수행했다.

또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입지선정위원들에 대한 사전로비 의혹을 없애기 위해 업체를 비공개하고 설명회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조사용역 수행에 대하여도 사전에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항목 배점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를 참고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필자는 소각장설치를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면서 사업추진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배정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주민보상수혜의 차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각장 설치예정마을에 출장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불만도 함께 이해하는 방식으로 주민과의 친근감을 높여 나가면서 보상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아산시의 쓰레기소각장시설 입지선정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게 된다.

사례를 기준으로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피시설 입지선정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되 정부와 주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은 그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단지 지역 이기주의의적 발로로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게 됨에 따라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

적 불이익 이외에도 시설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피해 역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물론 환경적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집중투자 하는 것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주민과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기피시설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입을 지기하락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편익시설의 개방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자 민주주의에 기초한 참여자치를 근간으로 한다.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공공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개진되고 욕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민기피시설 설치의 수많은 진통과 지역적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아산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 납골당, 하수처리시설 등을 건립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과의 집단적 반발과 갈등을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원칙으로 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추진과정에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접촉과 설득을 통하여 주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민 기피적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갈등이 갈수록 고도화·조직화되고 더욱 과격성을 띠게 된다는 사실이며, 앞으로 지방행정의 갈등관리도 전문화되어야 하며 지방차원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갈등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한국NGO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열려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회관에서
충남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 마련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하 포럼)과 한국 NGO학회 공동으로 주최 하는 학술대회가 학회회원 포럼4대권역별 회원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협력 모델, 갈등해결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지역의 갈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주제발표로 나선 박상필 교수(성공회대)는 '한국사회에서의 정부-NGO(주민)관계 모형의 전개와 탐구'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이어 제2주제발표는 박홍엽 박사(국회 예산정책처)의 '소통, 대안, 합의형성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모델의 탐색'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제2부는 배운환 박사(충남대)는 '당진항 지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결 행동'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임정빈 박사(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는 '천안·아산역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충남지역에서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수찬 교수가 진행한 3부 지역협력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발제에 나선 김옥교 수(배재대)는 '충남지역 협력사례를 설명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이 나와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구간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례를 분석,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NGO 협력모형'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토론자로는 국제뇌교육전문대학원 김선미 교수와 김제선 대전참여연대집행위원장이 박상필교수와 박홍엽박사가 발제한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고 한국공공행정학회 이준건사무국장, 윤영채충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배운환 박사(충남대)와 임정빈 박사(선문대)의 지역갈등사례에 대한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을 벌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충남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과 질문이 오고갔으며, 특히 관과 시민단체·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포럼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교환하는 '다자간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 이러한 '담론형성과정'을 통해 갈등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공론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학술 대회는 식전행사로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초대 공동대표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시종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역 언론 동향

보령 외연도 앞바다서 어민들 해상시위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어민을 주축으로 홍성, 태안어민들은 250여척의 어선을 대천항에서 28km 떨어진 외연도 앞바다에 집결시키고 해상시위를 벌였다. 시위 어선들은 높은 파도 때문에 1시간 30여분 동안 항로에 정박해 있다 모두 칠수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일부 어선들은 보령화력발전소 앞바다로 시위 장소를 옮겼다.

이날 어민들은 "한국중부발전(주)의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유연탄 수송 때문에 이 항로 주변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업권 보상평가지침에 명시된 8.3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2008-10-24)〉

대전-충남권 수도권 규제완화 "최대 피해자다"

외자유치 1위 충남 타격 '휘청'... 국토중심 대전 '공동화 우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던 바람과는 달리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가 강력 반



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로 인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충청권으로 이전해 왔고 특히 충남의 경우 민선 4기 이후 외국 기업 유치에 매진하면서 ‘전국 최우수 외자유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맛봤다.

〈디트뉴스(2008-10-31)〉

쓰레기장 전략한 장항물량장

-폐선박 폐그물에 각종 생활쓰레기까지 쌓여

서천 장항물량장이 각종 불법 행위로 신음하고 있다. 어민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무질서한 불법 행위가 난무하면서 점차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항물량장 곳곳엔 어민들이 무단으로 방치한 폐선박과 그물 등 각종 어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등 생활폐기물까지 쌓여있다.

서천수협 관계자는 "지역수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물량장에서의 이기적인 불법 행위는 삼가야 한다"며 "현재 장항항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규정한 법규준수와 주민 편의적 관리요구 관철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충청투데이(2008-10-02)〉

“바다 매립 석유탱크 결사반대”

(주)CPC, 공사 추진에 대산 대죽, 독곶리 주민 반발... 사업설 명회 무산

바다를 매립해 액체화물 저장탱크 시설 공사를 하겠다는 석유탱크 회사의 구상이 인근주민들이 삶터를 짓밟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벽에 부딪혔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산을 사무소 회의실에서

액화석유 저장탱크 터미널 시공업체인 (주) CPC가 대산읍 독곶리와 대죽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설명회 장소를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주) CPC는 육지에는 액화시설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 대산 대죽리의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12만㎡넓이의 액화석유저장탱크 터미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의뢰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대산읍 대죽리와 독곶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마지막 남은 바다마저 없어지면 지역주민들은 살길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도일보(2008-10-02)〉

300일의 기적 '서해안 부활하다'

-전국민 성원 봉사로 기름유출사고 극복

수산물생산도 회복...피해보상 재기 열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10월 1일, 서해안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300일을 맞았다. 사고 직후 지워지지 않던 기름때처럼 주민들의 가슴에도 어둠과 좌절이 맺혀 있었지만, 주민들의 높은 재기욕 및 전국민의 성원과 맞물려 서해안은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 4월 어선어업을 시작으로, 5~8월엔 마을어업, 8월 말 형망어업, 8~9월엔 나잠·맨손어업 조업재개 등 지난달 3일부로 전면 조업재개가 완료됐고 주민들은 다시금 생계의 터전으로 나가고 있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4월 조업재개 이후의 태안군 수산물 생산량도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도일보(2008-10-02)〉



"중앙소방학교 공주 이전 막자"

- 정부 이전방침 알려지며 천안 주민들 반발

유량동 주민 지역사회 힘 모아달라" 호소

정부가 천안시 유량동 중앙소방학교를 공주로 이전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앙소방학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설립계획이 백지화된 경호안전교육원 사업부지(공주시 사곡면 240만여㎡)에 천안 중앙소방학교를 옮겨 가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재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전에 따른 예산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온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소방학교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확보에 들어가는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주 경호안전교육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동네 한가운데 태양광발전 '웬말'

홍성 금당리 인근 5개 마을 주민 강력반발... 道에 진정서 제출기로

최근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기 위해 충남도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인근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홍동면 금당리 산30번지 일대 3만여평의 임야에 서울시 강남구 신모씨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충남도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모씨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은 충남도에 접수후 지방자치단체및 홍동면의 타당성 여부 검토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져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도일보 2008-10-7일〉

청주·청원통합 주민갈등 깊어

청원시승격추진위, 참여연대 재통합 주장 철회 촉구

청주·청원 통합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시민사회단체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원시 승격추진위원회(이하 청원시 승격추진위)'는 21일 오전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양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청주·청원 재통합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청원시 승격추진위는 이어 "청원시 승격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군민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충북참여연대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 단체 회원들의 '청원땅 못 밟기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투데이〉

옥천은 대전과 통합을 원한다

최근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 옥천에서는 사회단체가 대전과의 통합을 원하는 현수막을 거는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옥천읍내 주요장소 3곳에는 JC 특우회에서 내건 우리는 대전과 통합을 원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을 설치한 JC특우회조영서 회장은 "옥천은 대전과 10분거리에 있고 대전과 4차선과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어 대전경제권이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옥천 영동 금산을 묶는 행정구역개편에는 반대한다. 옥천군민들 중 90%이상이 대전과의 통합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에는 사회단체들이 뭉쳐 행동으로 보일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2008-09-18), 19면〉

‘폭탄과 동거’ 불안해 못살겠다

- 보은 법주리 주민(주)한화 화약저장고 국방장관에 탄원

“폭발시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 안돼”...허가과정 의혹제기

(주)한화 보은공장의 화약저장고가 인근 마을인 법주리, 하전리와 불과 300m- 9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이곳 주민들은 화약고를 안고 살고 있다고 국방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주리 주민 60여명은 지난 달 26일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한화보은공장과 울타리를 맞대고 사는 마을로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폭약공법상 저장소와 민가와 법정 안전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폭약저장소의 폭약 저장량 ▲폭약저장소의 정확한 위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제공 ▲책임있는 국



방부직원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확보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폭발물이 폭발할 경우 최소한의 철수거리(노출인원에 대한 안전보호 및 안전통제가 요구되는 거리)는 폭약10톤 기준으로 897m로 확인됐다.

〈중도일보〉

천안지역, 화장시설 등 혐오시설 광역화 여론

화장시설을 비롯한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해 광역화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넘비현상과 지역 이기주의로 지자체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대한 간접 예산까지 투입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679억 5,200만원의 막대

한 예산을 투입 광덕면 원덕리 산107번지일원 17만 2,651㎡ 부지에 연건평 2만 604㎡의 추모공원을 오는 2009년까지 완공예정이다.

화장로 8기와 3만 1,080기의 봉안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은 향후 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화장로 4기와 5만기의 봉안시설을 증축 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고 있다. 천안시는 추모공원이 완공되면 인근 아산, 연기, 공주시 등 충남 서북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일보〉

"균형 상생 조울 공식합의기구 절실"

정책 결정시 '수도·비수도·정부' 포함 기구 합의로 지역간 발전 모색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일련의 추진방향이 수도권 중심의 '강자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9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역 간 상생 발전전략'을 주제로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충청투데이〉

대산임해공단 상생발전 연구

서산시 연구팀 조직... 인근지역 주민지원도

서산시가 대산지역 임해공단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착수했다. 6일 서산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갖춰 시설물의 중복투자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공단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해 상생의 발전방안을 만들

자체 연구팀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구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업을 포함한 자체 연구팀을 구성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키로 해 예산절감 효과도 얻게 된다.



〈중도일보〉

순천향대 “철도공사, 전형적인 탁상행정”

수도권전철 역명 ‘신창역’으로 결정 관련 강력 대응 밝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전철 아산구간 역사 명칭을 놓고 지역 대학과 한국철도공사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역명 결정에 있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철도공사 측의 기본 방침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달 11일자로 아산시가 통보한 ‘신창순천향대역’을 사실상 반려하고 ‘신창역’으로 결정,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신창순천향대역’은 순천향대 뿐 만 아니라 아산시가 2차례나 지명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거면 자치단체의 의사를 묻은 이유가 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디트뉴스〉

논산 벌곡면, 원불교 공원묘지 주민반발 고조

700여명 ‘계획 철회’ 대규모 집회

원불교 공원묘지 설립에 반대〈본보 5월14일자 12면·7월4일자 11면·10일자 10면 보도〉하는 논산시 벌곡면 주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여는등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원불교 공원묘지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유정호·한삼천리 이장)는 1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양산리 종교단체 입구에서 전유식 논산시의회 의장, 이상구 부의장, 김용제 의원과 벌곡면 주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묘지 설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납골묘지설치 심사청구 즉각 철회와 문화재보호구역 철저보호, 벌곡면민 행복과 재산 사수, 원불교 납골묘계획 당장 철회, 논산시 벌곡에 더이상 혐오시설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전일보)

“대기업-대학-중소기업 상생 가교”

한기대 직업능력개발 모델, 전국 8개 대학으로 확산·전파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단장 이우영)이 개발·운영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능력개발 모델'이 전국 8개 대학으로 확산, 전파된다.

1일 한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재고를 위해 중소협력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High-Tech'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Bridge) 8곳을 선정했다.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은 '대기업-대학-중소협력업체' 간 상생의 HRD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한기대, 삼성전자·삼성SDI, 관련 협력업체 간에 이뤄지고 있는 실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 이번에 선정된 8개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은 지역별로 창원대, 인하대, 경일대, 영남대, 목포대, 광주대, 신홍대학, 동명대며, 올 한해만 이들 대학에 총 88억원이 지원된다.

〈디트뉴스〉

‘희망 쏘아올린 강한충남’ - 道 시책 성공과정 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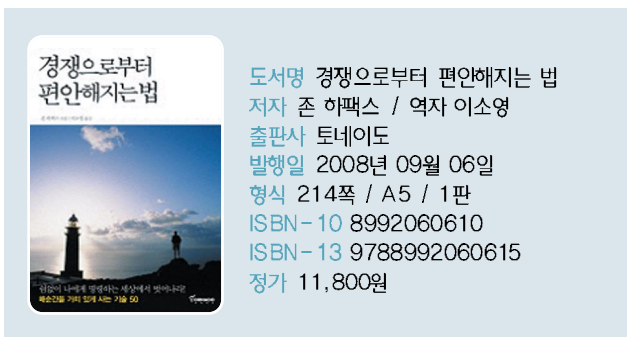


“민선 4기 충남이 거둔 눈부신 성과 뒤에는 문전 박대를 당하면서도 뛰어다니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땀이 있었습니다”

충남도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시책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충남도 공무원들의 열정의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수록한 책을 펴 냈다. ‘희망을 쏘아 올린 강한 충남의 사례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책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기업규제 개선 특례법을 비롯해 국방대 논산유치,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서해선 철도 및 보령-안면 연육교 건설, 전국 최고의 외자유치 등 민선 4기 충남의 주요 성과를 거두기까지 발로 뛰어다니는 공무원들의 애환을 실명과 함께 수록돼 있다.

이 책에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관련 단체, 도민을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여과 없이 담겨져 있다. 또 공무원들이 토론과 고민을 거듭하며 보다 완벽하고, 실질적인 시책을 만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도 그려져 있다.

경쟁으로부터 편안해지는 법



현실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 법!

『경쟁으로부터 편안해지는 법』은 경쟁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살도록 안내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행복을 주로

‘이 다음에 이를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이겨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행복은 특별한 기회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차후의 목표가 아니다.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 지금 당신은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는 덧없는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자는 주어진 행복을 마음껏 발휘하는 법을 알려준다. 먼저 끝없는 경쟁에 쫓겨 속도와 효율만을 내세우다 영혼을 잃어버린 현대인을 위로한다.

특히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얼마나 많은 승리를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경쟁의 고통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고 조언한다. 그런 다음 ‘익숙해져 버린 것과의 결별, 마음의 속도 늦추기, 타인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기, 아이에게서 인생 배우기,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자기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기’ 등 50가지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

미래와의 소통 -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길을 묻다



도서명 미래와의 소통 -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길을 묻다
저자 이동수 외
출판사 이매진
발행일 2008년 05월 09일
형식 276쪽 / A5 / 1판
ISBN-10 8990816610
ISBN-13 9788990816610
정가 14,000원

소통이 부재한 사회, 시민사회의 미래를 묻는다

한국 시민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일별할 수 있는 다섯 주제를 각각 학자와 시민운동가가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살펴본 『미래와의 소통』이다. 총

5부로 나누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소통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통하여, 다가올 미래와 소통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2007년 경희 NGO 포럼’에서 발표된 글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부 ‘한국의 청년,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서는 청년이라는 세대 집단의 역사와 미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2부 ‘정부와 시민사회, 소통할 수 있는가’에서는 참여와 거버넌스, 참여정부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 의존의 현황과 미래를 가늠해본다. 3부 ‘시민사회와 시장, 한국에서 대안적인 시장은 구성될 수 있는가’에서는 다원적 경제의 주체인 사회적 기업과 대안적 시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4부 ‘한국과 세계, 한국 시민사회는 세계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에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부 ‘시민사회와 자본, 한국의 시민사회는 건강한가’는 공공성과 경영 개념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점검해본다.

세종처럼 -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도서명 세종처럼-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저자 박현모
출판사 미다스북스
발행일 2008년 01월 25일
형식 496쪽 / A5 / 1판 / 양장본
ISBN-10 8989548721
ISBN-13 9788989548720
정가 25,000원

오천년 우리 역사의 전성기를 연 ‘세종대왕’의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세종처럼』은 "15세기 조선의 기적"을 이룬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현대 경영에 접목시킨 책으로, 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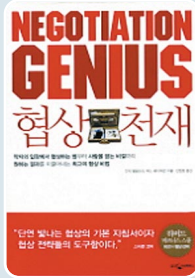
을 ‘신하들과의 소통, 백성에 대한 헌신, 국가의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등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저자는 21세기 지식창조경쟁사회에 요청되는 리더십의 표본으로 세종을 연구하였다.

방대한 <세종실록>을 탐독하며 ‘단 한명의 백성도 하늘처럼 받드는’ 세종대왕의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을 발견하였다. 그런 다음 국가의 최고경영자이자 리더인 세종을 입체적으로 통찰하고, 현대경영에 맞는 교훈을 이끌어냈다. 세종 리더십의 요체를 3부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마지막 4부에서는 세종의 어록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하들과의 열린대화와 토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습에서 열정의 리더로서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를 백성의 관점에서 보며 세종식 정치의 핵심을 ‘마음경영(감동경영)’이라고 명명한다.

또한 파저강 토벌을 예로 들며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이끌어서 추진하는 리더십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협상 천재 (원제 Negotiation Genius : How to Overcome Obstacles and Achieve)



도서명 협상 천재
저자 디팩 맬호트라, 맥스 H. 베이저먼 / 역자 안진환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발행일 2008년 06월 25일
형식 437쪽 / A5 / 1판
ISBN-10 8901082993
ISBN-13 9788901082998
정가 15,000원

-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협상 비법- 그 동안 수많은 협상 자리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았는가? 『협상천재』는 협상의 달인이 되어 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준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과 영향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협상 천재의 치밀한 준비 방법과 상황 대응전략을 협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수한다.

통합지향의 사회디자인



도서명 통합지향의 사회디자인
저자 양창삼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발행일 2007년 02월 28일
형식 페이지수 / 크기 341page / A5
ISBN 9788953465039/8953465036
정가 22,000원

세계는 물론 우리 사회는 미움과 질시로 화합보다는 반목이 더 두드러진다. 이런 세계의 아픔과 사회의 고질적 현상을 깨뜨릴 수는 없을까? 이 책은 바로 이런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통합(integration)’이라는 주제

에 관심을 갖고 최근 이것을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일을 해왔다.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세계화와 반세계화로 나뉘는 우리 세계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제2부는 차별당하는 성에 존중의 날개를 달아주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생명에 윤리의 옷을 입히며, 타나토스가 풍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을 찾고, 자아실현뿐 아니라 사회실현의 바탕을 모색한다. 제3부는 나눔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자본주의 성격을 규명하고, 기업윤리를 바로 세움과 동시에 나눔과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기 임원명단

〈가나다순〉

□ 상임고문

김용웅 원장(충남발전연구원, 상임고문)

박재묵 교수(충남대)

이은호 교수(청주대 명예교수)

최창희 교수(공주대 명예교수)

□ 공동대표단

이주영 교수(충남대) - 상임공동대표

조성남 주필(중도일보) - 언론계

정선용 사장(금강ENG) - 산업계

최진하 단장(UNDP금강습지사업단) - NGO계

이영세 박사(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여성계

□ 전임공동대표단

권경득 교수(선문대)

이상선 대표(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문갑 논설위원(대전일보)

한창숙 회장(충남새마을회)

□ 감사

조기돈 과장(충남도청 자치행정과, 당연직, 회계감사)

심규익 사무국장(충남발전협의회, 사업감사)

□ 자문위원

박종득 교수(배재대) - 자문위원장

박태순 소장(사회갈등연구소)

이동근 대표(우창해운주)

정낙규 대표(예산신문사)

차수철 운영위원장(푸른천안21)

한복룡 교수(충남대)

□ 협력위원

협력위원장 : 오열근 교수(단국대) - 협력위원장

김성완 박사(배재대)

송인진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윤치영 박사(스피치아카데미원장)

전영로 박사(충남테크노파크)

□ 운영위원장

최병학 박사(충남발전연구원)

□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사회통합 전문위원회

위 원 장 : 권선필 교수(목원대)

부위원장 : 복진국 사무처장(푸른충남21)

• 갈등연구개발 전문위원회

위 원 장 : 정종관 박사(충남발전연구원)

부위원장 : 이종상 교수(공주대)

• 갈등중재·조정 전문위원회

위 원 장 : 이영훈 교수(한서대)

부위원장 : 문순수 사무국장(푸른서산21)

• 대외협력 전문위원회

위 원 장 : 최한규 교수(단국대)

부위원장 : 최정열 박사(배재대)

• 민·관·군협력 전문위원회

위 원 장 : 최이조 박사(안보복지대학원)

부위원장 : 이명숙 교수(대덕대)

• 지역발전 전문위원회

위 원 장 : 심문보 교수(한서대)

부위원장 : 박병욱 대표(LG 손해보험)

• 여성발전 전문위원회

위 원 장 : 이갑숙 박사(시민사회연구소)

부위원장 : 여 영 이사(한국공공행정학회)

□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갈등교육훈련 분과위원회

제2기 임원명단

위 원 장 : 원성수 교수(공주대)

부위원장 : 배응환 박사(충남대)

• 참여적의사결정 분과위원회

위 원 장 : 신기원 교수(신성대)

부위원장 : 윤준상 교수(공주대)

• 갈등관리평가 분과위원회

위 원 장 : 박종관 교수(백석대)

부위원장 : 신 열 교수(목원대)

• 갈등협상 분과위원회

위 원 장 : 김선규 박사(한남대)

부위원장 : 임명재 박사(충남RHRD센터)

• 갈등사례연구 분과위원회

위 원 장 : 권경주 교수(건양대)

부위원장 : 유현숙 교수(대전대)

• 갈등영향분석·예측연구 분과위원회

위 원 장 : 길병옥 교수(충남대)

부위원장 : 최진진 박사(한남대)

• 사회위험갈등완화 분과위원회

위 원 장 : 김철중 박사(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부위원장 : 조치현 연구원(충남대)

□ 운영위원 및 운영간사

기획·조정 운영위원 : 성태규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운영간사 : 김대지 팀장(남서울대)

재정·회계 운영위원 : 정진현 교수(청양대)

운영간사 : 유준석 박사(단국대)

행사지원 운영위원 : 김겸훈 박사(한남대)

운영간사 : 양광호 교수(공주영성대)

지식·정보 운영위원 : 최호택 교수(배재대)

운영간사 : 이상용 박사(대전발전연구원)

홍보·출판 운영위원 : 박윤도 PD(대전KBS)

운영간사 : 정봉희 홍보팀장(충남발전연구원)

권역별포럼 지원 운영위원 : 고승희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운영간사 : 윤권종 박사(배재대)

홈페이지 운영위원 : 임정빈 박사(선문대)

운영간사 : 최정현 기자(뉴스1)

□ 「정책포커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최병학 운영위원장(충남포럼)

편집위원(가나다순)

길병옥 교수(충남대)

류상일 교수(대불대)

박수종 국장(충청뉴스)

오은순 교수(공주대)

이영훈 교수(한서대)

정봉희 홍보팀장(충남발전연구원)

편집간사 : 이준건 사무차장(충남포럼)

충남 4대 권역별 포럼 안내

북부권포럼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상임공동대표 : 오열근 교수(단국대) 011-789-4523 / yg4523@dankook.ac.kr

운영위원장 : 최한규 박사(단국대) 041-579-2300 / 011-283-5466 / abc5818@yahoo.co.kr

담당공무원 : 전경자(천안시) 041-521-5218 / 010-9402-9412 / one95ix9@cheonansi.net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중부권포럼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상임공동대표 : 조성국 회장(청양이장협의회)

운영위원장 : 조규영 대표(보령비치청소년연수원) 041-931-2226 / 016-858-2226

담당공무원 : 복규범 담당(보령시) 041-930-3238 / bgb63@hanmail.net
임양빈 011-9803-7071 / yim7071@korea.kr
<총무과 시정담당>

남부권포럼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상임공동대표 : 원성수 교수(공주대) 016-243-5455 / 041-850-8464 /
sswon@kongju.ac.kr

운영위원장 : 백종구 실장(공주시 행정지원실) 041-840-2210

담당공무원 : 김종건 담당(공주시) 041-840-2399 / 010-6753-0201 /
kjg0505@hanmail.net <행정지원실 대외협력담당>

서해안권포럼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상임공동대표 : 이상엽 교수(한서대학교 행정학과) 041-660-1282 / leesy@hanseo.ac.kr

운영위원장 : 신기원 교수(신성대) 041-350-1452 / 010-3410-8085

담당공무원 : 한기옥(서산시) / 041-660-2236 / 010-6437-1215 / (fax) 041-660-2237
jealous078@korea.kr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원고모집

충청남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지식·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정책포럼 사무국
전화(041) 840-1132~3 팩스(041) 840-1129
운영간사 이경용 E-mail: lky1981@cdi.re.kr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충남지역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성,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갈등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수 논문대회를 개최합니다.



논문공모내용

● 응 / 모 / 분 / 야

- 사회통합, 갈등해소, 협력·공존 등 충청남도과 관련된 각종 상생협력 및 갈등사안에 대한 정책 문제로 이론과 실재를 연계시킬 수 있는 내용
예)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사례, 갈등해소 노력, 충남의 방재·복구·봉사활동, 지역갈등 해소 방안, 민·관 협력사례 등

● 응 / 모 / 자 / 격

- 전국 대학원생 및 대학생

● 응 / 모 / 방 / 법

- 개인 또는 5명 이내 팀별

● 논 / 문 / 분 / 량

- A4용지 20매 이내로 한글 문서로 작성, 본문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를 기준으로 함 (원고 매수 초과는 감점)

● 논문접수 및 1차심사 결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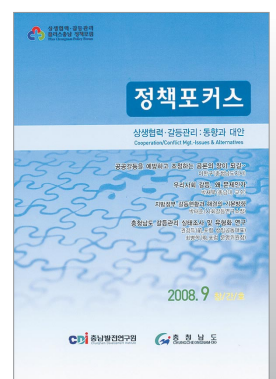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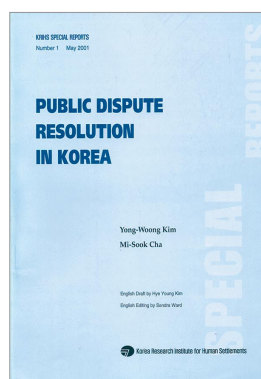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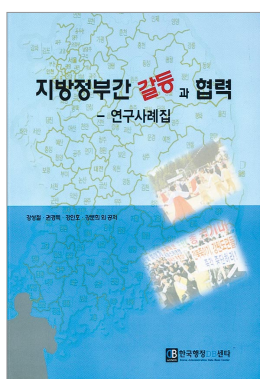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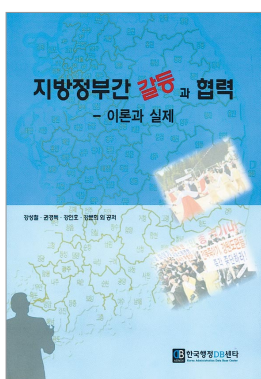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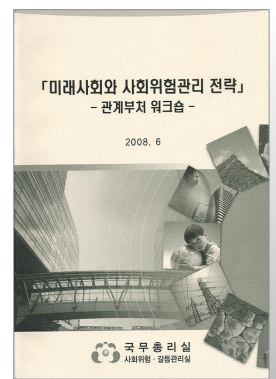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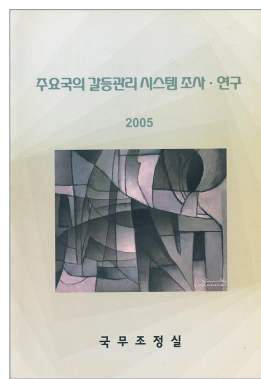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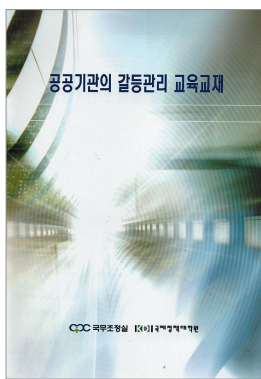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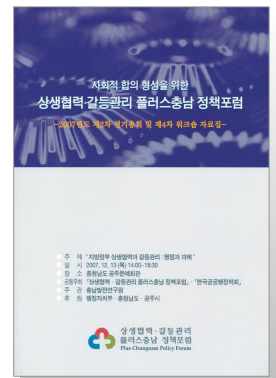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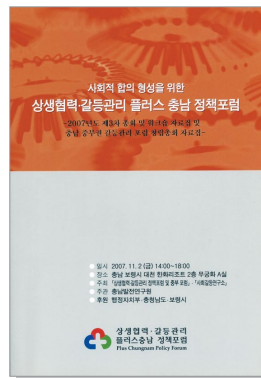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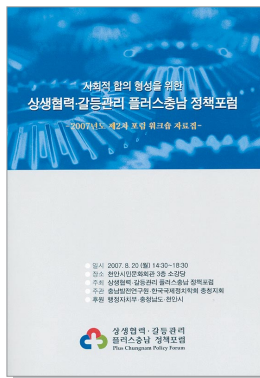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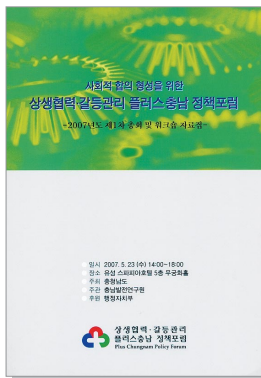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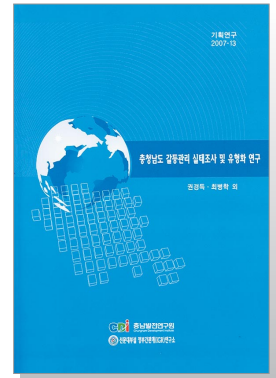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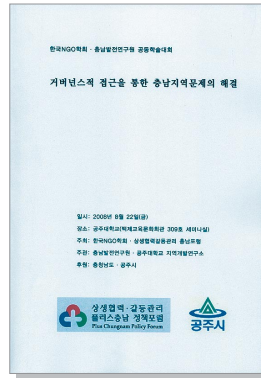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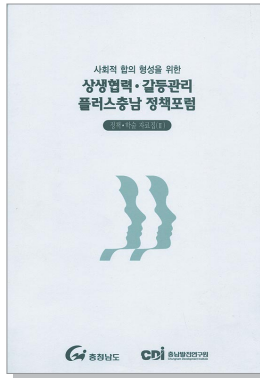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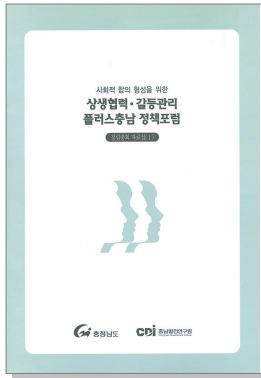
- 접 수 기 간 : 2008년 10월 27일(월) ~ 2008년 11월 11일(화) [접수기간연장]
- 접 수 처 :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사무국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논문접수 담당자)
- 전자우편접수 : lky1981@cdi.re.kr
- 문 의 처 : (041)840-1133 / 010-6827-0428 / Home : www.pcpf.or.kr
- 1차심사 결과발표 : 2008년 11월 14일(금)
※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진행

● 발표대회 및 시상식의 일시와 장소

- 11월 중 : 1차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발표형식 : 발표는 파워 포인트(PPT)를 이용하여 20분 이내 발표

● 시 / 상 / 내 / 역

- 2차(최종)발표심사 : 논문발표대회 행사당일 심사 후 결정, 시상식 개최
-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 : 대학원생/대학생 각1편 상장 및 상금 80만원
- 우 수 상 (충남발전연구원장) : 대학원생/대학생 각1편 상장 및 상금 40만원
- 장 려 상 (포럼상임공동대표) : 대학원생/대학생 각2편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참가팀(학생·지도교수님)은 충남포럼의 명예회원 자격 부여



정책포커스

상생협력·갈등관리 : 동향과 대안
Cooperation/Conflict Mgt.-Issues & Alternatives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Plus Chungnam Policy Forum